

동향&이슈

NO. 3

2020.10.15

전남 생활임금제도의 합리적 정책방향

CONTENTS

이슈/ 1)생활임금제 5주년, 확산을 기대하며,
2)전남 생활임금제도의 합리적 정책방향에
대한 소고

조사보고/ 2020년도 전남 생활임금 만족도 조사
결과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남노동권익센터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112. 3층 전화 : 061)723-3860~1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전화 : 061)287-3860~1 팩스 061)287-3862

홈페이지 : <http://www.jecec.kr> /편집인 : 정책기획팀 문보현 / 발행인 : 문길주

조사보고

2020년 전라남도 생활임금 만족도 조사결과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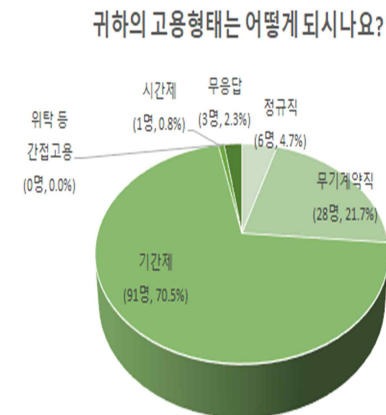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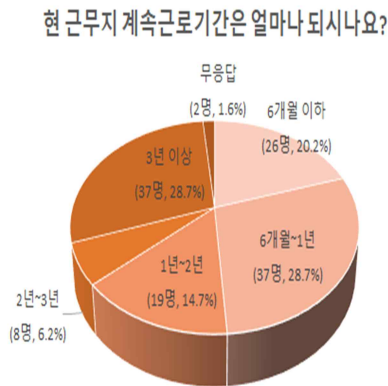
- 생활임금만족도 조사는 적용 기관·단체 59개소, 대상자 325명[미시행기관 등 24개소, 응답률은 생활임금수혜자 81%(159명 중 129), 미수혜자 68.7%(166명 중 114명)]을 수혜자, 비수혜자 및 미시행기관 등 3 집단으로 나눠 각각 직접면접방식과 자기보고식으로 진행함.
- 생활임금 수혜자 집단에는 1) 인구학적 사항, 2) 생활임금에 대한 인식, 3) 생활임금 도입 후 달라진 점, 4) 생활임금의 만족도 및 의견 등 29개 문항을, 비수혜자 집단에는 1), 2)는 수혜자집단과 같은 내용, 3) 생활임금 시행을 위한 방안 등 16개 문항을, 미시행기관에는 생활임금에 대한 인식과 생활임금 미시행 이유, 생활임금 시행을 위한 방안 등 4개 문항을 자기보고식으로 진행함.
- 생활임금에 대한 인식은 수혜자, 비수혜자 모두 과반이 생활임금이 무엇인지 몰랐고, 자신이 대상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등 생활임금조례의 목적에 따른 제도의 홍보, 확산 등에 활동 미흡으로 나타남.
- (수혜자대상)생활임금 도입 후 달라진 점으로 1) 소비 및 지출, 2)직장, 고객 및 동료 등과의 관계, 3) 업무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고, 4) 전반적으로 삶(일자리, 교육기회,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여가 등)의 만족도가 보통 이상인 것으로 조사됨.
 -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상대적인 임금상승효과는 있으나, 여유 있는 소비활동은 여전히 곤란함.
- 생활임금의 만족도 및 의견은 보면, 현재의 생활임금의 만족 정도는 보통 47.3%, 만족 31.8%, 불만족 10.9%, 매우 만족 7.8%순으로 나타나,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2021년 희망 생활임금액에 대한 의견)은 11,000원~12,000원 구간이 45%로 가장 높았고, 12,000원 초과에서 15,000원 이상까지의 구간이 31%로 나타났으며, 산입범위는 기본급+교통비+식대기준(41%), 기본급(37.2%), 현행(6.2%) 등으로 약 78.2%가 산입범위를 좁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함. 비수혜자 집단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없이, 위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남.
 - 생활임금 결정기준은 물가상승률(55%)이 가장 높았으며, 생계비(31%), 실업률과 경제상승률(5.4%) 순으로 조사됨. 생활 가운데 다른 요소보다 물가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음. 비수혜자 집단의 응답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옴.
 - 생활임금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64%), 사업주(26.4%), 노동자(8.1%)순으로 나타남. 비수혜자 집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음.
 - (미 시행기관 담당자)의 62.5%는 생활임금제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37.5%는 몰랐던 것으로 나타남.
 - 생활임금제를 시행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1) 기관·단체의 예산부족이 가장 많았고, 2)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함. 3) 예산편성지침 상 인건비 인상률 결정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에서 제외되나, 생활임금에 대해서는 제외사항이 없음. 4) 정보부족으로 최저임금만을 지급하는 등으로 조사됨.
 - (미 시행기관 담당자)생활임금 시행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매체를 통한 광고, 사업주의 설명과 노동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 이 번 조사는 생활임금 적용대상 기관·단체의 재직 노동자 중 생활임금을 받는(수혜)자와 받지 못한(비수혜)자, 미시행기관도 포함하여 수행하였음.

1. 생활임금 수혜자 대상조사 주요결과

1) 기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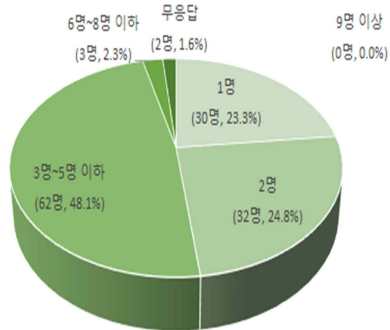
- 응답자의 성비를 보면 여성 70.5%(91명), 남성 29.5%(38명)으로 여성비율이 높고, 연령은 ‘31세 이상 40세 이하’가 25.6%(33명), ‘30세 이하’ 22.5%(29명), ‘41세 이상 50세 이하’ 21.7%(28명), ‘51세 이상 60세 이하’ 17.1%(22명)순으로 나타났으며, 무응답을 제외하고 연령층 비율은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 계속근무기간은 응답자 중 6개월 초과 1년 이하와 3년 이상이 각각 28.7%로 57.4%를 차지하였고, 고용형태는 기간제가 70.5%(91명), 공무원 21.7%(28명), 정규직 4.7%(6명), 시간제 0.8%(1명)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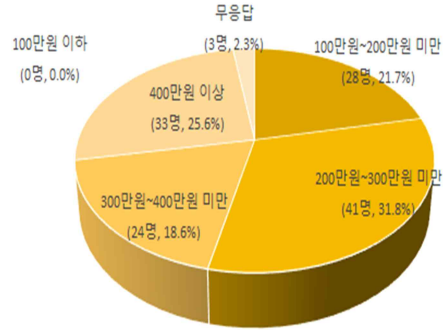
- 임금(월 실수령액)은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인 65.9%(85명)로 가장 높았고, 200만 원 이상 250만 원 미만 24.0%(31명),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 5.4%(7명), 2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1.6%(2명)으로 과반이 150만 원~20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부양가족 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가 48.1%(62명)으로 가장 높았고, 2명 24.8%(32명), 1명 23.3%(30명)으로 나타났으며, 월 가구소득은 200만~300만 원 미만 31.8%(41명), 400만 원~ 25.6%(33명), 100만 원~200만 원 미만 21.7%(28명)로 나타나, 대략 2020년 도시노동자 3인 이하 가구 월평균 소득 (50%: 2,813,448원, 60%:3,376,138원, 70%: 3,938,828원, 80%: 4,501,517원)의

50%~80% 구간에 들어있음.

귀하의 현재 부양가족수(본인 포함)는?



월간 가계 총 소득수준(귀하의 소득 포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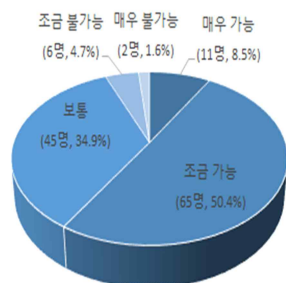
2) 생활임금에 대한 인식

- 응답자 중 51.2%(66명)가 생활임금을 모른다고 답하였고, 생활임금 적용대상인데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제도 자체를 몰라서가 66.4%(47명), 급여명세서에 생활임금수당 항목이 없어서 20.5%(15명), 사업주의 설명이 없어서 11.0%(8명)순으로 나타나, 생활임금제에 대한 홍보가 미흡함을 알 수 있음.
- 생활임금이 현행 최저임금제의 한계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71.3%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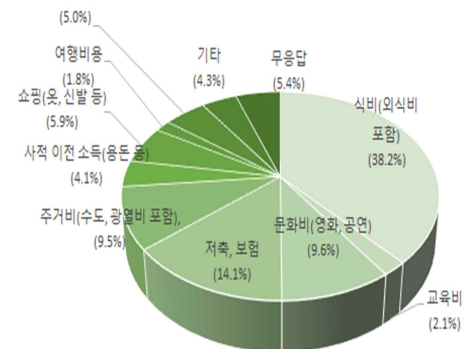
3) 생활임금제 도입 후 달라진 점

- 생활임금제 도입이 소비 및 지출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 있는 소비가 가능해졌다가 50.4%(65명), 보통 34.9%(45명)으로 수혜자들에게 상대적 임금인상 효과는 있으나, 여유 있는 소비활동이 가능한 일정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생활임금 도입 후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소비가 가능해 졌습니까?



어느 분야의 지출이 늘어났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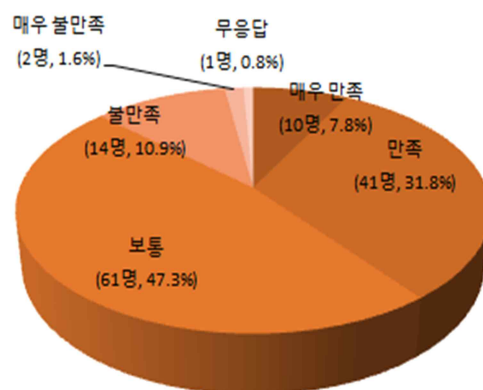


- 직장, 고객 및 동료 등과의 관계에 미친 영향으로는 ① 직장에 대한 애사심이 다소 향상되었고, ② 고객이나 동료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③ 업무상 스트레스의 완화에는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업무성격과 환경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는 단언할 수 없음.
- 생활임금 도입 후, 업무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① 보통보다 조금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다. ② 근무시간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③ 직무만족도, 업무능력 향상 및 이직생각을 하지 않게 됐다는 등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생활임금제 도입이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일자리를 구할 필요가 다소 줄었으며,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나 교육기회 등도 조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됨.

4) 생활임금 만족도 및 의견

- 2020년 생활임금에 대해 보통이 47.3%(61명)로 가장 높았고, 만족 31.8%(41명), 매우만족 7.8%(10명)순으로 39.6%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받고 있는 생활임금에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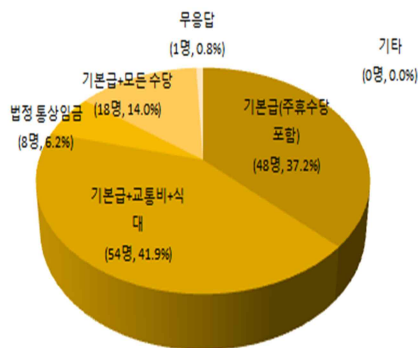


- 2021년도 희망 생활임금액은 12,918원으로 현행 10,380원의 124.45%로, 지난 5년간 평균 120%보다 4%가량 높음.
- 희망액은 11,000원 20.16%(26명), 15,000원과 12,000원이 각각 19.38%(25명), 20,000원과 10,500원이 각각 6.2%(8명)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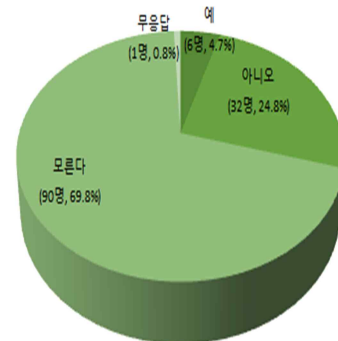
응답내용	응답자수	비율	응답내용	응답자수	비율
10,000원	1	0.78%	11,980원	1	0.78%
10,380원	1	0.78%	12,000원	25	19.38%
10,400원	1	0.78%	12,300원	1	0.78%
10,500원	8	6.20%	12,360원	1	0.78%
10,550원	1	0.78%	12,380원	2	1.55%
10,700원	2	1.55%	12,500원	3	2.33%
10,880원	1	0.78%	13,000원	6	4.65%
11,000원	26	20.16%	14,000원	2	1.55%
11,500원	4	3.10%	15,000원	25	19.38%
11,530원	1	0.78%	17,000원	1	0.78%
18,000원	1	0.78%	20,000원	8	6.20%

- 생활임금의 산입범위에 관해서는 현행 산정기준인 통상임금보다 좁은 기본급+교통비+식대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41.9%(54명)으로 가장 높았고, 기본급(주휴수당포함) 37.2%(48명), 현행보다 조금 넓은 기본급+모든 수당 14.0%(18명), 현행과 동일 6.2%(8명)순으로 조사됨.
- 현재 생활임금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243개 시·도, 시군구(42%) 101곳)는 산입범위를 기본급만 산입(①형), 기본급+고정수당(②형), 기본급+교통비or식대(③형), 기본급+교통비+식대를 기본으로 하여, 자격수당or 기타 고정수당(④형-전남도유형), ④형을 기본으로 하여, 상여금or 가족수당(⑤형), 복지포인트까지 포함 사실상 임금 총액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적용(⑥형)등으로 분류됨.

생활임금 미달 여부 판단기준 임금항목으로 적당한 것은?



급여명세서 구성항목중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있습니까?



- 생활임금 결정 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물가상승률 55.0%(71명), 노동자의 생계비 31.0%(40명)으로 나타남. 과반이 물가상승률로 응답한 것은 생활임금의 성격에 비춰 봤을 때, 적용 대상노동자들이 물가상승률을 쉽게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며, 노동자의 생계비를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 생활임금이 원활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응답자의 64.0%(82명)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고, 그 다음으로 사업주 26.4%(34명), 노동자 8.1%(10명)순으로 조사되어, 생활임금의 정착을 위해서는 결정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
- 생활임금 개선점이나 보완사항에 대한 수혜자들의 의견

◆ 생활임금 개선점이나 보완사항에 대한 수혜자들의 응답 내용

- 식비 및 교통비를 지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확대해야함. 생활임금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
- 기간제 근로자의 월급은 정규직에 비해 다소 떨어져 있으니 기본적인 생활에 물가상승분 고려해야 함.
- 지역물가상승률에 맞춰 생활임금도 상승했으면 좋겠다.
- 생활임금을 준 강제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 경력자와 신규자의 급여차이가 없어서 업무의욕이 저하
- 생활임금산입범위를 기본급으로 산정
- 사업주의 충분한 설명
- 업무능력 평가에 따라 생활임금을 인상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봤으면 합니다.(비율을 반영한다든지)
- 지자체 홍보가 필요
- 생활임금 홍보 부족으로 생활임금 인식이 부족하다 노동자가 월에 받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원한다.

2. 생활임금 비수혜자 대상조사 주요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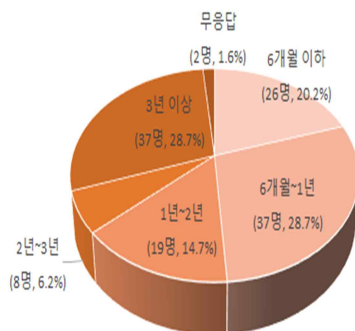
가) 기본정보

- 응답자의 성비를 보면 여성 70.5%(91명), 남성 29.5%(38명)으로 여성비율이 높고, 연령은 ‘31세 이상 40세 이하’가 25.6%(33명), ‘30세 이하’ 22.5%(29명), ‘41세 이상 50세 이하’ 21.7%(28명), ‘51세 이상 60세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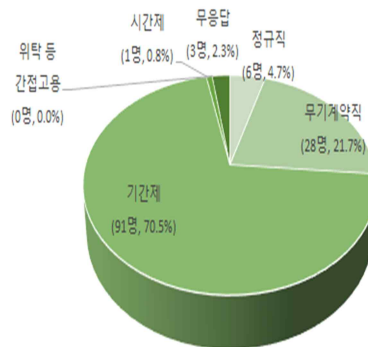
하' 17.1%(22명)순으로 나타났으며, 무응답을 제외하고 연령층 비율은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 계속근무기간은 응답자 중 6개월 초과 1년 이하와 3년 이상이 각각 28.7%로 57.4%를 차지하였고, 고용형태는 기간제가 70.5%(91명), 공무원 21.7%(28명), 정규직 4.7%(6명), 시간제 0.8%(1명)순임.

현 근무지 계속근로기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귀하의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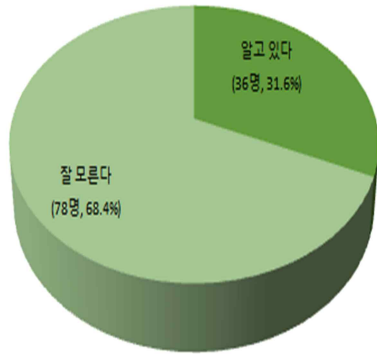


- 임금(월 실수령액)은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 66.7%(76명)로 가장 높았고, 200만 원 이상 250만 원 미만 28.1%(32명),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 3.5%(4명), 2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1.8%(2명)으로 과반이 150만 원~20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수혜자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는 없음.
- 부양가족 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가 50.9%(58명)으로 가장 높았고, 1명 25.4%(29명), 2명 22.8%(26명)으로 나타났고, 월 가구소득은 200만~300만 원 미만 34.2%(39명), 300만 원~ 400만 원 미만 16.7%(19명), 100만 원~200만 원 미만 26.3%(30명)로 나타나, 수혜자 집단과 가구소득에서 각 소득구간에서 $\pm 2\sim 3\%$ 차를 보이나 두 집단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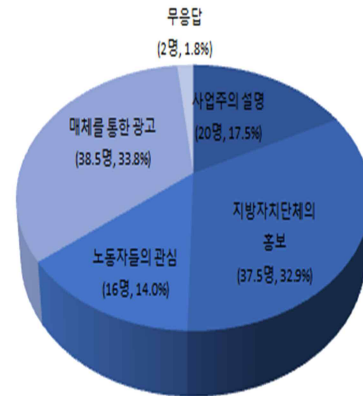
나) 생활임금에 대한 인식

- 수혜자 집단과 마찬가지로 응답자의 68.4%(78명)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임금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매체를 통한 광고 33.8%(38명),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32.9%(37명), 사업주의 설명 17.5%조사됨.

생활임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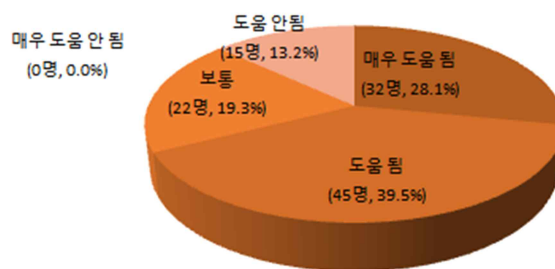


생활임금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제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가 39.5%(45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매우 도움이 된다 28.1%(32명), 보통 19.3%(22명)순으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도 13.2%(15명)있음. 이는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있으나, 보통 혹은 도움이 안 된다는 견해도 존재, 생활임금이 실제로 최저임금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생활임금이 최저임금 한계극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2021년도 희망 생활임금액은 13,103원으로 수혜자집단의 희망금액인 12,918원 보다 조금 높은 수준임.

다) 생활임금 시행을 위한 방안 등

- 생활임금의 산입범위에 관해서는 현행 산정기준인 통상임금보다 좁은 기본급+교통비+식대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31.6%(36명)[수혜자집단 41.9%(54명)]으로 가장 높았고, 기본급(주휴수당포함) 29.8%(34명)[37.2%(48명)], 현행보다 조금 넓은 기본급+모든 수당 25.4%(29명)[14.0%(18명)], 현행과 동일 13.2%(15명)[6.2%(8명)]순으로 나타나, 수혜자집단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 생활임금 결정 시 우선 고려사항에 관해서는 수혜자 집단과 같은 결과를 보임.
- 생활임금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67.5%(77명)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사업주 25.4%, 노동자 순으로 수혜자 집단과 유사하게 나타남.
- 생활임금 시행방안에 대한 비수혜자들의 의견

◆ 생활임금 시행방안에 대한 비수혜자들의 응답 내용

-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각 사업주가 생활임금대상자에게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음. 생활임금을 더 많이 홍보해서 근로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보조금을 받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매년 보조금은 동일하나 인건비는 매년 오르고 사업비는 줄일 수가 없어 생활임금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올리면 생활임금을 반영한 임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바탕으로 고용주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생활임금적용대상자는 예산확충을 통해 모두 적용되도록 해주기 바람.
- 사업비와 별도로 생활임금보조수당을 책정해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바람
- 생활임금에 대한 홍보 필요
- 국도비로 운영되어 운영지침에 의거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어 생활임금적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자체의 추가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 국도비로 운영되는 기관은 생활임금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인건비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 기본적인 실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을 만큼의 생활임금이 책정되었으면 합니다.
- 사업주의 충분한 인식변화와 교육이 필요
- 생활임금 홍보(개념, 도입배경, 최저임금과의 차이 등)
- 근로자 간 격차 해소
- 기관별 상황에 맞게 사업주의 적극적 홍보 필요.
- 생활임금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와 노동자의 상호노력 필요
- 각종수당은 별도 지급이 바람직함.
- 사업주가 생활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지 필요.

3. 생활임금 미 시행기관 대상 조사결과

가) 생활임금에 대한 인식

- 생활임금제를 62.5%는 알고 있었으며, 미 시행 사유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나, 가장 큰 이유는 예산상의 문제로 나타났으며, 그 밖의 사유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음.

◆ 생활임금 적용대상 기관임에도 생활임금을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 정보부족, 통상임금이 근로기준법과 달라 생활임금대상자 파악이 어려움
-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함. 기관자체예산 및 추가보조금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임
- 보조금교부결정에 따른 수령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인한 어려움(인건비지급인원이 확정되어 내려옴에 따라 사업비 및 인건비편성에 어려움이 따름)
- 산림청 산림교육운영지침에 1일 7만원으로 책정되어 더 이상 집행할 수 없음
- 예산부족, 제도에 대한 인지를 못함(2020년 첫 공문수신)
- 2020년 성문화센터 운영지침에 의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추가지원 불가함
- 18년부터 시행한 후 사업비 동결에 따른 인건비 증액하지 못함. 전년도 체전참가 실적 중심으로 선수와 협의 후 급여산정
-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2020년 보육교직원 인건비지급기준"에 따른 교직원인건비만 지급하였음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상 인건비 인상률 결정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에서 제외되나, 생활임금에 대해서는 제외사항이 없어 급여인상시 반영하기 어려움. 생활임금적용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면 인건비 인상률 준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2015년 전라남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는 광역이동지원센터(한시정원) 상담원이며 전라남도생활임금제도가 실시되기 이전 채용인력임
- 예산부족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미치지 못함
- 예산부족(재정적인 부분), 정규직 직원의 급여보다 더 많은 역전현상 발생
- 적용대상 인식부족과 생활임금 관련된 정보부족
- 도비보조금 지원단체인 본회는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함
- 보조금 사업장으로서 예산이 부족함
- 기관 내 예산부족
- 예산부족
- 본 기관은 국비 50%,도비50%를 지원받는 위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운영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급여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생활임금에 대한 인식 부족과 예산부족
-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되는 줄 알고 있었음. 경력에 따라 연봉을 차등 책정하고 있으며, 경력자들 생활임금 적용시 예산에서 인건비부담이 높아지므로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

- 나) 생활임금 시행을 위한 방안으로는 고정된 예산을 통해 기관으로 하여금 자체 충당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을 검토, 임금 인상분을 반영,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4. 소결

- 생활임금에 대한 인식은 적용 대상자(수혜자, 비수혜자)가 제도를 ‘잘 모르고’ 자신이 대상자로서의 인식미흡 등이 생활임금제도의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의 부재가 문제임.
- 생활임금에 대한 만족의 정도는 보통 47%, 만족 39%로 불만스러운 수준은 아니며, 직장, 고객 및 동료와의 관계나 애사심의 향상, 업무상 스트레스 완화 등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생활임금 도입 후, 업무능력 향상, 직무만족도에 다소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특히 이직희망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생활임금제 도입이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일자리를 구할 필요가 다소 줄었으며,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나 교육기회 등도 조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됨.

5. 제언

- 전라남도에서는 2016년 이후부터 최저임금 인상률,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인상률, 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유사 노동자 임금 인상률, 위원회가 판단하는 사항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 옴. 다만, 2017년 7월 15일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7년 대비 16.38% 인상하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연계도(의존도)가 높아진 것은 아닌지, 적용 대상인 노동자들에 대해 최저임금에 준하는 수준의 임금 기준으로서만 기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음.
- 전남의 생활임금은 2016년 시행된 이래로 전국 상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산입범위는 기본급+교통비+식대+상여금+가족수당+자격수당+그 밖의

고정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인데, 산입범위를 대폭 간소화시켜 기본급+교통비+식대 정도로 구성하고, 그 밖의 수당은 고용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생활임금의 목적에 가까이 접근하는 방향이며, 생활임금 수혜자들이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생활임금의 구성이기도 함.

- 생활임금 적용 대상인 일부 기관·단체에서 재정형편을 이유로 제도가 시행되지 못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생활임금 준수 가이드라인(지침)』 마련이 요구되며, 기관평가 시 생활임금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항목을 설정, 이를 반영하는 간접적인 준수 독려도 필요함. 다만 이를 위해서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해당함에도 생활임금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출자·출연기관 및 위탁받은 사무 수행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대한 예산의 반영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생활임금 미시행기관 담당자들의 답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같은 사업장(기관) 내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도비 지원 사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일부 노동자가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데 이에 따른 임금 격차와 당사자들의 근무의욕 감퇴·사기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전라남도에서는 2016년 이후부터 최저임금 인상률,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인상률, 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유사 노동자 임금 인상률, 위원회가 판단하는 사항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 옴. 다만, 2017년 7월 15일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7년 대비 16.38% 인상하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연계도(의존도)가 높아진 것은 아닌지, 적용 대상인 노동자들에 대해 최저임금에 준하는 수준의 임금 기준으로서만 기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음.